

# “교육 기본권 침해” vs “민주적 운영 제고”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4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작년 말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의 공조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립학교법(사학법) 헌법소원 사건의 첫 공개 변론을 열었다.

재판부는 작년 말 우암학원이 청구한 사건(주심 김중대 재판관)과 조용기 우암학원 설립자가 올해 3월 청구한 사건(주심 김희옥 재판관) 등 2건의 헌법소원 사건을 이날 병합했고, 병합 사건의 주심은 김중대 재판관이 맡았다.

정부와 사학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조항은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광의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 이사 정수의 4분의 1 이상을 선임하도록 한 개방형 이사제(14조3항) ▲선임 요건을 완화하고 임기 제한을 없앤 임시

## ■ ‘사학법 헌소’ 사학재단-정부 공방

### 내년 상반기 결정 가능성...재개정 여부 변수

이사제도(25조) 등이다.

◇“획일적인 관급형 공교육이 판치게 돼”=헌법소원을 제기한 청구인측 대리인인 이석연 변호사는 “개방형 이사제는 사학의 건학이념을 부정하면서 모든 사립학교 법인을 공립화, 사회화를 꾀하는 것으로 헌법의 기본 토대인 자유민주주의와 사적 자치, 자유시장경제를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학은 설립자의 사유재산도 아니며

그렇다고 공공재산도 아니다. 사적자치에 입각해 재단법인이 국가 간섭 없이 운영하는 게 본질이다. 이는 사학이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달라질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헌 변호사는 “사학 설립 목적과 전혀 관계없는 외부 인사가 사학 의사와 무관하게 학교 운영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한 타율적 제도는 경영권과 본질적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사학 운영의 민주·투명성 제고하려는 것”=반면 여당과 정부는 개정 사학법이 사학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여 교육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피청구인인 교육인적자원부의 대리인인 이재환 변호사는 “청구인들은 우리 사회에 이데올로기적 단죄를 유도함으로써 사학법 개정 이유의 본질을 감추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소원 심리 어떻게 진행되나=통상 공개변론이 열리고 1~2개월 뒤에 선고가 이뤄진 점에 비해 보면 한 차례 더 공개 변론이 열린 후인 내년 2~3월에는 사학법 위헌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연남뉴스

## 현장과 시각

### 전남 수능성적 언제까지 감출건가



최재호

체육부 차장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13일 2007학년도 대학수능 성적을 분석한 보도자료를 냈다.

자료내용은 지극히 간단했다. 이번 수능에서 1등급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언어영역 및 수리영역의 누적비율이 각각 0.1%가 증가했고 외국어 영역은 다소 감소했다는 것. 성적이 다소 떨어졌다는 표현인데 애매하기 짝이 없었다. 그리고 광주·전남 최고득점자가 전남에서 나왔다는 것이었다. 전남지역 수험생들의 전체적 성적분포, 등급별 점수율 등 전남 입시교육의 결과를 파악하기엔 너무 미흡했고, 다만 지역 수석을 전남이 차지했다는 것만 애써 알리려는 의도만 강조돼 보였다.

반면 광주시교육청은 달랐다. 광주지역 수능 수험생 중 1등급 이상 점유율이 언어와 수리, 외국어 영역에서 각각 7.1%, 6.4%, 6.1%로 전국 평균 5.4%, 4.2%, 4.7%보다 높았다고 발표했고 2등급의 점유비까지도 발표를 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수능시험에 관한 한 세부 분석자료 공개를 극구 꺼리는 오랜 습성을 올해도 어김없이 답습한 것이다.

분석자료를 내지 않을 수는 없고 해서 못한 것은 감추고 싶은 것만 알리는 극히 형식적인 자료 한장만 달랑 내놓았다.

담당 장학관은 “수능분석자료를 공개했을 때 학교간 위화감이나 시·도 간 격차가 드러나기 때문에 교육부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설명만을 반복했다.

또 다른 간부는 수능성적이 광주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광주와 비교하면 일선 근무자들의 사기가 떨어질까 봐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도교육청 장학담당자들이 이날 아침 모여 앉아 내린 결론은, 교육부의 원칙을 어기면서 광주·전남 수석합격자가 전남출신임은 널리 알리고 불리한 것은 철저히 감추자는 정도인 것 같다.

낙도·벽지학교가 많은 전남의 특성상 전남의 수능 성적이 높지 않다는 것은 광주·전남 학부모 모두가 안다. 그럴수록 전남 입시교육의 실상을 세상에 공개해서 비판받을 건 비판받고 지원받을 건 지원받는 게 제대로 된 교육행정이 아닐까.

손으로 하늘을 가리듯 등급별 분포 등 세부정보를 감춘다고 전남 수험생들에게 무슨 도움이 될건가. 하루빨리 구태를 벗어야 한다. /lion@kwangju.co.kr

## 美 “북한체제 안전 서면 보장 용의”

### ‘초기단계 이행조치’ 대가로...관계정상화 중간단계

미국은 지난달 베이징(北京)에서 진행된 북미 회동에서 북한측이 이른바 ‘초기단계 이행조치’를 수용할 경우 ‘북한체제 안전보장’을 서면으로 약속할 수 있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6자회담에 정통한 북측의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측은 당시 회동에서 9.19 공동성명의 정신에 입각해 ‘북한을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강조하면서 이런 미국의 의사를 지지 부시 대통령을 포함한 최고위층 명의로 된 ‘안전보장서’같은 서면으로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관심을 피려하면서 평양 수뇌부의 검토 후 6자회담에서 논의하지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채택한 9.19 공동성명에는 1항에서 ‘미합중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으며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공격 또는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 소식통은 “서면 양식의 체제안전보장서는 북미 관계정상화로 가는 중간단계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특히 체제안전보장서는 종전처럼 부시 대



송민순 외교장관이 14일 외교통상부 접견실에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버시바우 미국 대사를 접견하고 있다. /연남뉴스

령이 대북 불침묵사를 구두로 밝히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양자 차원에서 서면이 들어간 친서 형식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18일부터 열리는 6자회담에서는 북한의 초기단계 이행조치와 이에 상응하는 5개국의 대북 인센티브 내용을 조율하는 작업이 주제의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연남뉴스

LifeStylist 현대백화점 광주점



# MY FAMILY'S CHRISTMAS DIARY



## 크리스마스에 쓰는 엄마의 일기

우리 딸이 유치원에서 일곱 크리스마스 연극에서 프리 요정이 되었다. 오늘은 좋은 아이와 함께 연극에서 입을 프리 옷을 만들었더니 이전 훌륭한 꼬마의 작품이다. 그 나이엔 예쁜 옷을 입고 뽐내는 태세를 맡고 있는데 어떤 역할이든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기특한 나의 딸에게 박수를 보냈다. 인생이란 무대에서든 기적이 즐겁고 좋아하는 배우로 자라길!

현금/카드/상품권 구분없이 전종 영수증 합산가능

## 20만원이상 구매고객께 상품권을 드립니다

중정기간 : 2006. 12월 15일(금)~12월 25일(월), 11일간.  
중정장소 : 8층 시몬테라스



20만원이상 구매고객께  
1만원 현대상품권



40만원이상 구매고객께  
2만원 현대상품권



60만원이상 구매고객께  
3만원 현대상품권



100만원이상 구매고객께  
5만원 현대상품권

중정방법  
단일 상품영수증 1만원 초과 구매 영수증에 한하여, 본인 영수증에 한하여 합산이 가능합니다. 한 차례 영수증을 통합하여 상품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간 중 다른 행사와 중복하여 중정하지 않으며, 합산한 영수증 금액이 기준금액 이상이 되었을 때만 해당 상품권을 드립니다. 본 보편 적용 기준 금액은, 구매금액의 50%인 한도입니다. (소정기간은 100% 환불)

중정 제외대상  
양곡, 상복권, 문화상품권, 여행사, 임대보증금, 자동차(구입금) 및 일부 대형마트 중정에서 제외됩니다.